



군산항, 국제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 포트세일 ·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 특송화물 통관장 확대 등 핵심 전략 추진

군산항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을 추진하며 국제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김미정 국장은 20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군산항의 국제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포트세일 추진 △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 특송화물 통관장 확대 △ 준설 예산 확대 및 제2준설로 투기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등 관계 기관들은 힘을 모아 '포트 세일단'을 구성하고, 국내외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국내 주요 물류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마케팅과 함께 해외에서도 군산항을 알리는 홍보설명회를 열어 화물 유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자동차, 우드패킷 등 군산항의 주요 전략 화물을 확대 유치하고,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항은 지속적인 토사 퇴적으로 인해 수심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물동량 유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준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항만 운영, 배후단지 관리, 포트세일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설 전문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효과, 재정 자립도,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개장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은 1년 만에 약 700만 건의 특송 물류를 처리하며 전년 대비 340%의 급증한 성과를 거뒀다.

군산항이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송업체 유치 확대와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 통관장 규모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군산항은 토사 퇴적으로 인해 계획

된 수심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선박의 입항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항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군산항 유지 준설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 준설로 투기장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설계 및 시공 적격자 선정 후 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126년간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으로 자리 잡아왔다"면서 "올해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산항이 국제 물류의 중심항만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에서 '비즈 오픈스페이스' 개소식이 열렸다.

농생명 · 식품기업공간 '문 열다'

바이오진흥원, '비즈 오픈스페이스' 개소
국내 · 외 바이어 상담, 정보공유 공간 활용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대표인 "순창지역에서는 온라인 내에 1인 창업기업 또는 전주에 소재하지 않는 도내 농생명 · 식품 기업 임직원들이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 오픈스페이스'를 마련하고, 2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비즈 오픈스페이스'는 전주에 소재하지 않는 청년 창업자들이 우수 인력 채용시 전주, 익산 등 거점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에 의해 구축하게 됐으며, 창업보육센터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화상회의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국내 · 외 바이어 상담 또는 기업간 정보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소재 맑은상회 F&B 김지향 대표는 "순창지역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분야 등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워 바이오진흥원에서 마련한 '비즈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비즈 오픈스페이스 구축을 계기로 농생명 · 식품 분야 젊은 창업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공간의 장점을 잘 살려 함께 협업하고 고민하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

기관 · 입주기업 참여 협의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CO SE), 입주(예정)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신산업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새만금이 더욱 발전된 친환경 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협력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우수사례'

전북 2차 특구 관련 기회발전특구 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교육 · 지역산업 조화로 지역인재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협력사업이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56개 특구 가운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북 2차 특구를 포함한 17개 특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신청한 특구가 모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차 특구와 관련,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협력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발전특구 내

특성화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청-특성화고-지자체-기업 간 협력으로 △전주 탄소융합 △익산 건강식품 △정읍 동물약품 등 다양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으로 취업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교육과 지역산업이 조화를 이뤄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탄핵…尹과 일부 겹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이번주 내 통지하지 않는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회 지연 등의 사유도 쟁점이다.

미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까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탄핵 사유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겹치는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다.

